사회초년병·자영업자 DTI 규제 예외 검토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개념인데 이들은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대출상환능력은 충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라는 판단에서다.

5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DTI 40%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장 부작용이 클 수 있는 계층으로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들이 거론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에따라 과거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병들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에게 DTI 적용범위를 40% 이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과거 소득이 거의 없을 수 있고 미래 소득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亞 문화도시 조성 금남로 프로젝트와 연계

문광부 '7대 문화지구 조성 등 종합계획안' 광주시에 통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인 문화전당 주변이 '금남로 프로젝트'와 연계 개발돼 예술인공방거리,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도심캠퍼스 등으로 조성된다.

문화관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을 광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문화관광부는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오는 4월까지는 최종계획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1만8천170㎡부지에 연면적 13만3천78㎡로 옛 전남도청 일원에 2010년 5월 18일까지 지어진다. 주요 시설은 아시아문화교류센터·아시아문화원·아시아아트플렉스·어린이지식문화센터 등으로 운영인원은 222명 규모다. 문화전당은 특히 디지털 기반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립되며 본격적인 시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또 7대 문화지구는 ▲핵심 문화(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아시아 문화(사직공원, 양림동 일대) ▲아시아 신과학(광산구 비아동 일대)▲아시아 문화전승(남구 대촌·칠석동 일대)▲문화경관·생태보전지구(무등산·광주호·영산강·황룡강 일대) ▲교육문화(서구 마륵동 탄약고 부지 일대)▲시각 미디어(북구 중외공원 일대) 지구 등으로 당초 발표됐던 예비종합계획에서 일부 변경됐다. 문화경관 생태보전지구에 영산강·황룡강이 추가되고, 아시아 신과학지구가 서구 중앙공원 일원에서 광산구 비아동 일대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핵심문화지구인 옛 전남도청 일대와 동구 충장로·금남로 등은 문화전당·금남로 프로젝트와 연계해 예술인 공방거리 등을 조성하고,도심캠퍼스를 유치하는 등 문화거점으로 리모델링 된다.

남구 사직공원·양림동 일대 '아시아 문화지구'에는 창작·기획인 거주지와 공방거리, 아시아 음악·문화·음식 등이 집적, 아시아문화가 일상적으로 교환되는 시장 역할을 하게 된다.

광산구 비아동 일대는 아시아 지식 연구소와 아시아 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서 아시아 전승 지식 및 토착기술과 현대 과학이 접목되는 '아시아 신과학연구지구'로 가꿔진다.

남구 대촌·칠석동·효천 역세권(아시아 전승문화지구)에는 고싸움을 비롯한 민속놀이 및 남도문화를 전승·발전시키기 위한 '아시아전승놀이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무등산·광주호·영산강·황룡강(문화경관·생태환경 보전지구) 일대는 생태문화공원·신앙경관지역·풍수시범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환경을 모색한다

마륵동의 '교육문화지구'는 에듀파크·청소년지식박물관·교육문화주거단지로 조성되며, 중외공원 일대의 '시각미디어 지구'에는 '색채 문화센터' 등이 들어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등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광주시의 안을 만들어 26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전남 경총 신년인사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는 5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인사회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등 각급 기관장과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설

F1대회 전남 개최 '발목잡기' 안된다

전남도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F1(포뮬러1) 세계자동차경주대회에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전남도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F1특별법안에 대해 인천시가 형평성 등을 제기하며 법 적용 대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2010년 F1대회의 유치를 공식선언한 전남도의 입장에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의 요구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전남도는 이미 F1대회 관리기구인 FOM 및 한국측 대회운영 조직인 카보(KAVO)와 유치 조인서에 서명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2010년부터 7년동안 전남에서 F1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인천시가 뒤늦게 전남의 F1대회에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은 잘못된 일이다.

'꿈의 레이스'로 불리는 F1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F1대회 유치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회에 성공하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레저관광산업에도 엄청난 효과를 미치게 된다. 전남도는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가신용도 상승 등을 종합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쉬운 것은 아니다. 경기장 건설비 2천500억원을 비롯해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개최료 등 재원조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전남 F1대회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협조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

위험수위 넘은 지식인 표절·대필 시비

요즘 학계와 출판계가 표절과 대필 시비로 어수선하다. 지난해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불러온 표절 의혹 공방이 이필상 고려대 신임총장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작가이기도 한 마광수 연세대 교수가 제자의 시를 도용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급기야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한모 부학장이 논문을 대필하거나 표절하고 논문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학생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취득시켜 준 혐의로 사법당국에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진리의 전당'이며 다른 집단보다 높은 도덕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대학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의 신인도 추락은 물론 국제적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선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나서 대학의 연구윤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연구윤리국까지 설립했다.

우리 학계는 연구윤리가 제도화되지 않은 탓에 표절이 드러나도 관행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온 게 사실이다. 국내 대학 가운데 연구윤리 헌장 및 규정이 있는 대학은 20%도 채 안 된다고 한다. 대학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대학도 많다.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연구실적을 베끼고 표절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제도화하고 검증체제를 갖추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 잇따른 논문 표절과 대필 시비에 대해 학계의 진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세배 파문' 원희룡 의원 "盧대통령 功 많다"

한나라당 대권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사회 구석구석에 있었던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몰아냈다는 것은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경유착, 가족과 측근 비리는 역대 정권에 비해 가장 깨끗했다"면서 "지방분권의 결과는 땅값 폭등으로 왔지만, 지방에 대한 애정과 자원배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큰절'을 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의례적인 세배 자체가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보조금 전격 축소

SKT·LGT 내달 1일, KTF 20일부터 1만~5만원까지

이통 3사, '이용 약관 변경' 뒤늦게 공개, 소비자 반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휴대전화 보조금을 내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조금 허용에 따른 실제 혜택이 계속 축소됨에 따라 새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오는 2월1일부터, KTF는 이달 20일부터 일부 구간의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5일 밝혔다.

SKT는 월평균 4만원 이상 사용자 중 월평균 9만원 이상 및 8년 이상 사용층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보조금을 1만원 축소했다. 또 3만원 미만, 가입기간 18개월~3년 미만 사용층에 대한 보조금도 1만원 축소했다.

KTF도 보조금을 최저 1만원에서 최대 5만원 내린다. KTF는 월평균 9만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 중 5년~7년 및 8년 이상 사용층에 대해 5만원의 보조금을 줄였으며 8년 이상 사용하면서 7만~9만원 이상 사용층의 보조금도 4만원 축소했다.

LG텔레콤은 월평균 이용금액이 7만원 이상, 3년 미만 사용한 고객층과 월평균 이용금액이 3만~4만원이면서 8년 이상 사용한 고객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용층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대비 1만~4만원 줄였다.

이에 따라 ▲월평균 이용금액이 3만원 미만 고객의 경우 1만~2만원, ▲월평균 이용금액이 3만~4만원이면서 사용기간 7년 미만인 고객은 2만원 ▲월평균 이용금액이 4만~5만원과 5만~7만원인 고객은 1만원씩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중고폰을 반납하는 가입자에게는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F는 이같은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려 일부에서는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SK텔레콤측은 이와관련, "약관 신고를 한 뒤 수정 부분이 발생, 이를 고친 뒤 알릴 계획이었고 홈페이지에는 지난 1일부터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KTF도 "약관 신고를 한 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했고 5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납북어부' 최욱일씨 5일 한국측 인도

외교부 "불성실 직원 응분 조처하겠다"

중국으로 탈북 후 납북자단체의 보호를 받아왔던 '납북어부' 최욱일(67)씨가 5일 한국 정부 측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탈북을 주선한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최씨의 신병이 5일 옌지(延吉)의 은신처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인도됐다"며 "현재 입국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어 6일 새벽 옌지에서 선양(瀋陽) 총영사관으로 숙소를 옮겨 입국 전까지 머물 예정이다.

최 대표는 "최씨가 강력하게 한국행을 원하고 있어 (입국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송환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씨의 부인 양정자(66)씨는 이날 외교통상부를 항의 방문했다. 양씨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회장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 이혁 아태국장 등 당국자에게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 직원들이 최씨의 도움 요청에 무성의하게 응대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오징어잡이 어선 '천왕호' 선원으로 1975년 납북됐다 지난 달 말 탈북한 최씨는 이달 2일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질문받는 등 박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13일 출국

'아세안+3 정상회의' 등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14~15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 기간에 중국, 일본과 3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13일 출국한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5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제안하는데 이어 아세안 10개국과 합동정상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한-아세안 FTA 협상을 평가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를 재확인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5년내 꼴찌는 않겠죠?!

"또 性 사고냐" 한나라당 곤욕

강 대표, 대변인 통해 사과 진화 나서

與 "性나라당…의원직 사퇴하라" 공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4일 기자간담회 도중 한 일간지의 연재소설 주인공과 관련된 성적 농담을 하면서 불거진 '성(性) 사고'로 한나라당이 또 다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파문과 정모 전 당진 당원위원장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당사자가 취임 이후 '참정치'를 주창하며 당원들의 몸조심, 입조심을 누차 강조해 온 당 대표였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움은 더 크다.

이미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을 '성(性)나라당'으로 비꼬면서 강 대표를 상대로 대표직은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한 듯 강 대표는 사건 다음날인 5일 나경원 대변인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나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 공식 인사가 끝난 뒤 테이블에 앉은 몇몇 사람들과 사적인 얘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황우여 사무총장이 현 정부의 언론탄압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화일보의 '강안남자' 얘기를 꺼내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였다"며 "그러나 이 문제로 물의가 빚어져 유감을 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DJ, 미얀마 방문 거부당해 "수치 가택연금 해제" 촉구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일 미얀마 군사정권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연금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최경환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자격으로 '여성 노벨평화상 수상자 이니셔티브'가 추진하는 '미얀마 민주화 캠페인'에 동참, 비자를 신청했다"며 "하지만 대사관측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접수할 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매우 유감이다. 앞으로도 수치 여사의 연금 해제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최 비서관은 전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